전남도, 5·18 기념사업에 무관심

사적지 1호 지정 않고 도청 현판활용사업 지지부진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전남도 "상반기 종합계획 마련"

전남지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지지부진하다. 5·18 전국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사적지 지정 작업을 비롯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양새다.

◇"5월 전에 전남 5·18 사적지 1호 지정한다더니…"=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영암 1·민주)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 3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진척없는 '옛 전남도청 현판 활용사업', '전남 제 1호 사적지 지정' 문제를 따졌다. '전남 제 1호 사적지 지정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5·18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여태껏 후속 조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 의원 주장이다.

우 의원은 용역을 통해 나주시 옛 금성파출소 무기고, 목포역 광장, 화순 너릿재 터널 등 전남지역 87곳이 5·18 민주화운동의 사적지 가치를 지닌 곳으로 파악했지만 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라 여태껏 사적지 지정 기준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올해 5·18 39주년 기념일 전, 전남지역의 5·18 민주화운동 1호 사적지 지정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우 의원은 "전남도는 지난해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올해 기념일 전에 전남 5·18 사적지 1호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5·18에 대한 전남도 업무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옛 도청현판 활용해 전시공간 만든다더니…"=전남도가 공공기록물로 관리중인 5·18 당시 전남도청 현판을 활용한 기념사업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옛 전남도청 현판은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광주 동구 금남로) 정문에 부착됐다가 2005년 10월 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옮길 당시 떼어졌다. 현판은 지난 2017년 7월 국립과학수사과학원으로부터 '현판 함몰 흔적 7개 중 하나는 M1 카빈소총이나 권총탄과의 충격으로 생겼을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해 말 3억100만원을 들여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를 활용, 5·18 당시 옛 전남도청 모습을 재현하는 형태의 전시공간을 조성해 '옛 전남도청 현판'을 전시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올렸지만 전남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전남도는 애초 도청 윤선도홀에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한 상설 전시공간을 세우는 방향을 검토했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뿐 아니라 전남도 함께 했음에도 자체적 기념사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5·18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전남도 차원의 5·18 기념·교육·학술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40주년인 내년부터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종이비행기 날리며 웃음꽃 활짝 6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벚꽃이 핀 공방의 거리에서 열린 '제2회 웃음꽃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광주시 창업도약 패키지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80억 확보 2021년까지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3~7년차 창업도약기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 등 창업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7년부터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을 추진하며 96개 기업에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주시는 2021년 4월까지 8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3~7년차 지역 문화콘텐츠 창업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4월까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문화콘텐츠분야 창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tct.or.kr),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신현대 문화산업과장은 "창업기업의 다수가 창업도약기의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들의 투자난을 해소해 광주시가 발굴·지원한 우수 문화콘텐츠 창업자들이 소멸되지 않고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日 3만t급 크루즈선 1000명 신고 9일 여수항 입항

오동도·순천만정원 등 관광

오는 9일 일본 크루즈선사 피스보트의 3만t급 '오션드림호'가 일본 고베항에서 승객 550명, 승무원 500명을 싣고 여수에 입항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션드림호' 관광객들은 여수와 순천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6개 코스로 나눠 기항지 관광을 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지는 여수 오동도와 아쿠아플라넷,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등이다.

올 한 해 여수를 통해 전남을 방문하는 해외 크루즈 관광객은 총 7항차 2만 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해외 크루즈 노선 다변화와 일본, 타이완 등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크루즈 관광객 편의를 위해 여수시, 여수엑스포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전남 크루즈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또 법무부 등 CIQ(세관·출입국·검역)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 등을 위해 관광상륙허가 사전 신청, 입국 심사대 확충, 출입국 심사 직원 임시 파견 등 크루즈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관광상륙허가는 크루즈 승선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비자 없이 3일 동안 허용하는 제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R&D사업' 16억 지원

전남도가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사업'을 도입해 16억원을 지원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을 통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사업에 지원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개 과제당 최대 2년간 연간 3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해당 중소기업은 과제비의 30%를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 2억원 당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또는 입주 확약 중소기업이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사업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자유롭게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단을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정가

김광란 광주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실해소…' 토론회

광주시의회 김광란(민·광산4)의원은 지난 4일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와 함께 하남시영2단지 내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공실 해소와 청년주거 문제해결'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현장에 있다. 침체된 영구임대 아파트 문제와 청년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내고 이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바탕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철 전남도의원 "완도~고흥간 건설사업 최우선 채택해야"

이철(민주·완도 1) 전남도의원은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하나인 '완도~고흥 간 건설사업'과 완도지역 숙원사업인 '소안~구도 간 연륙교 사업'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에서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가 배제돼 완도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면서 서남해안 관광도로 완도~고흥 간 국도 77호선 승격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에서 종합적으로 2단계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